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제주지역 토론회

| 일 시 : 2019. 2. 26(화) 15::00

| 장 소 :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

| 주 최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 제주연구원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제주지역 토론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 자리 마련

개요

- 일 시: 2019. 2. 26(화) 15::00
- 장 소: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
- 주 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제주연구원

프로그램

시 간	행 사 내 용
14:30~15:00	사전등록
15:00~15:20	개 회 식 개 회 사 김동전(제주연구원 원장)
15:20~15:50	발 제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
15:50~16:00	Break Time
16:00~16:50	좌장 : 김동전(제주연구원 원장) 지정토론 (6명) - 강기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역경제 분야) - 강수영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일자리 분야) - 강창희 제주대학교 화학 · 코스메틱학과 교수(환경 분야) -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사회복지 분야) -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문화관광 분야) - 민 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사회혁신 분야)
16:50~17:00	종합정리 및 폐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봄을 알리는 새싹의 기운이 온 누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시절을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포럼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에 대해 주제발제를 해 주시는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 포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국민을 이끌어 가는 국가 주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출산율, 고용율, 행복지수, 사회복지, 노동시간, 사회 안전, 가계부채, 노인 빈곤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금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관광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국가가 국민을 받드는 나라,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 배양을 통한 혁신의 3대 비전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 안전망 구축' 등 9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포용으로 성장의 효과를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누리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포용국가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정책토론회는 시대적 과제에 담대하게 도전해 포용경제, 포용외교, 포용사회, 포용정치, 포용문화가 융합 발전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명견만리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 지역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토론을 해주시는 제주대학교 강기춘 교수님, 강창희 교수님, 민기 교수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부위원장님과 한라대학교 문성종 교수님,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강수영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봄의 상서로운 기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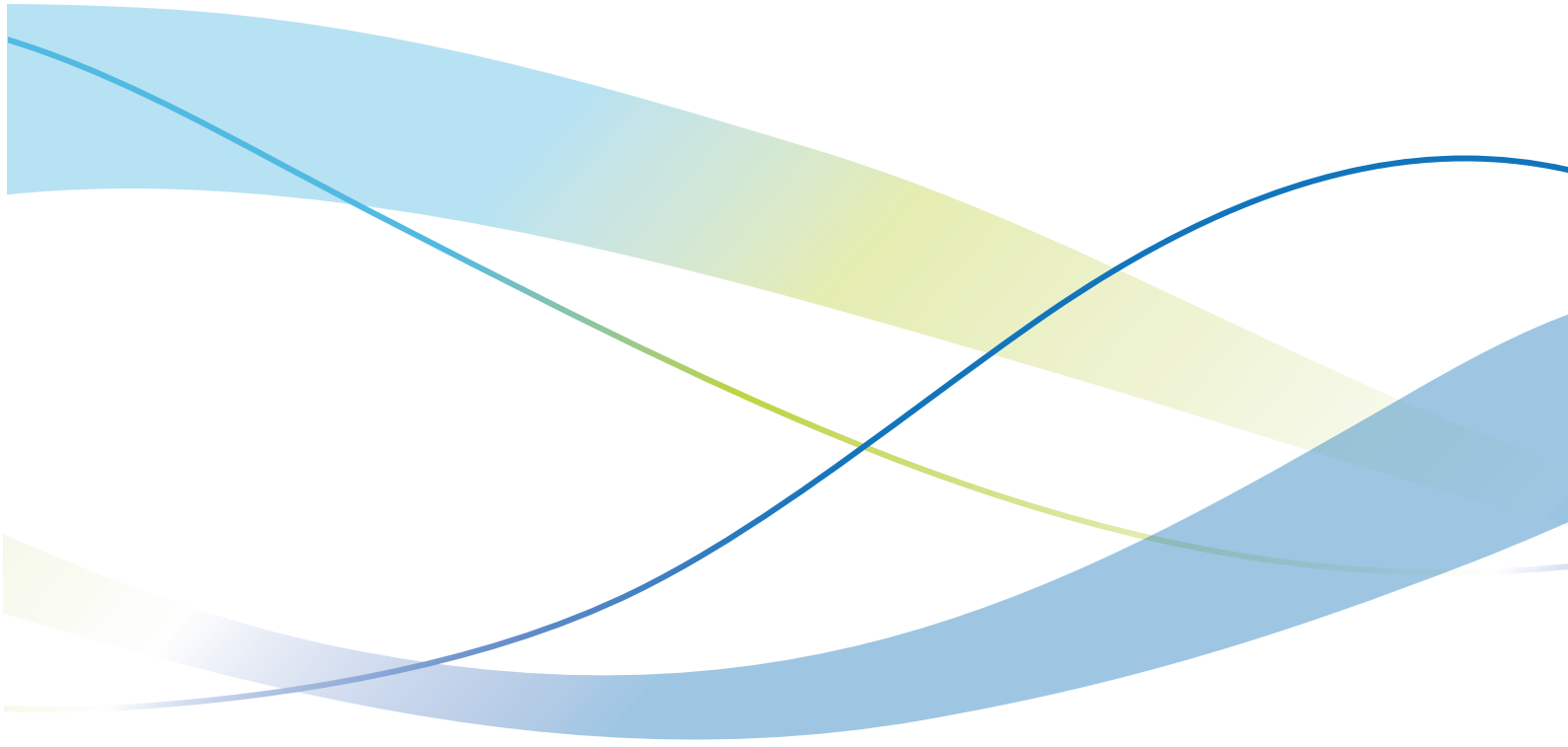
2019년 2월 26일

제주연구원장 **김 동 전**

발 제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의
사회정책 분야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2019. 2. 26(화)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미래정책연구단장
꽃동네대학교 교수

혁신적 포용국가의 선포

'18. 9.6 포용국가 전략회의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18. 9.26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음" "포용국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나라임"
'18. 11.18 APEC 정상회의 발언문	"우리 정부는 사회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습니다."
'19. 1.10 신년 기자회견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문재인대통령, 2019년 2월 19일 포용국가현장보고회에서 발췌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2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과 포용국가

3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2017. 7.)과 포용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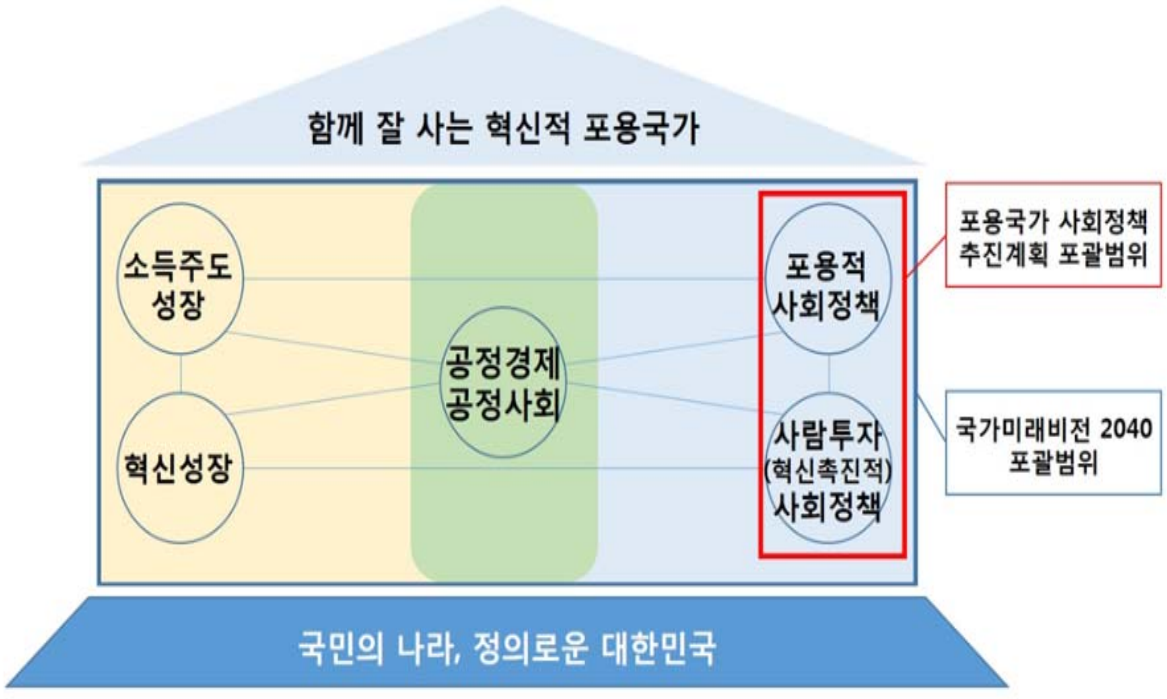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15개	26개	32개	11개	16개

포용국가 = 포용적 민주주의 + 포용적 경제 + 포용 사회 + 포용적 지역발전

4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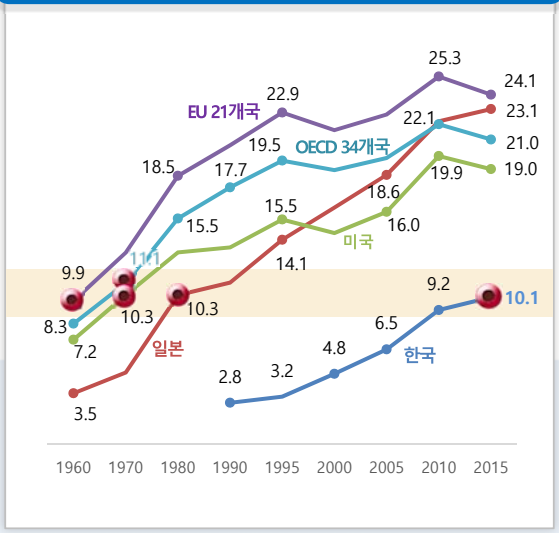
5

왜 포용국가인가?
- 한국의 복지국가 현실로 부터

한국 사회정책의 궤적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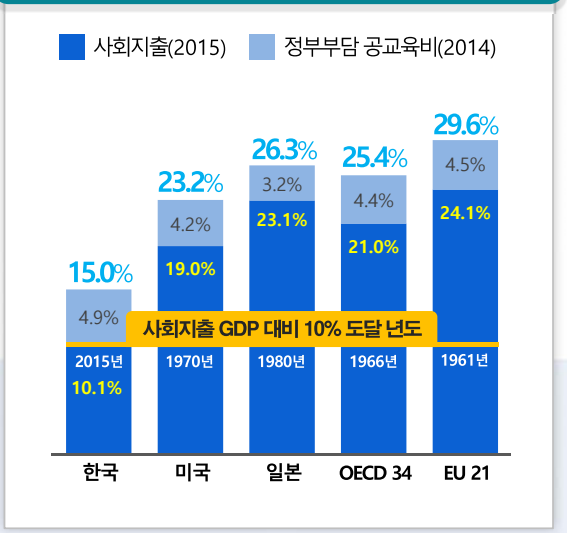
사회정책의 성과 : 복지국가 '초기단계' 진입

GDP 대비 사회지출비 추이(1960-2015)
교육비 지출 제외



사회정책의 꾸준한 발전으로 한국은 2010년 이후 사회지출이 GDP 10%에 도달하여 유럽이 1960-70년대 도달한 '복지국가 초기단계' 진입

사회정책 관련 공적사회지출 GDP 비율
교육비 지출 포함



사회지출비가 늘어나고 있으나 공교육비를 포함한 복지·노동 등의 사회정책관련 총지출의 GDP 비중은 15.0%로 OECD 평균 25.4%에 여전히 상당히 미달

사회정책패러다임의 성찰과 방향

기존 사회정책패러다임의 특징 : 최소주의 사회정책

발전국가패러다임 → 발전국가+신자유주의+진보주의 → 발전국가+신자유주의

박정희·김영삼(1961-1997)	김대중·노무현(1998-2007)	이명박·박근혜(2008-2017)
• 국가주의 교육투자와 교육의 시장화 • 국가재정 최소화의 보수주의 복지정책, 민간보험시장 성장 유도 • 가부장주의와 국가발전수단으로서 여성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억압적·통제적 노동정책 • 공해방지 위주의 사후규제	• 교육 민주화와 공공성·공평성 강조 • 보수주의 복지정책의 진보적 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 •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과 성주류화 전략 •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일부 진전	• 선택과 경쟁의 신자유주의 교육 • 보육서비스 확대 등 일부 진전에도 전반적 복지비용 억제 전략 • 성평등 실현보다는 저출산·저성장 해결 수단으로서의 여성정책 • 노동 교섭력 약화 등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가속화 • 4대강 사업 등 환경정책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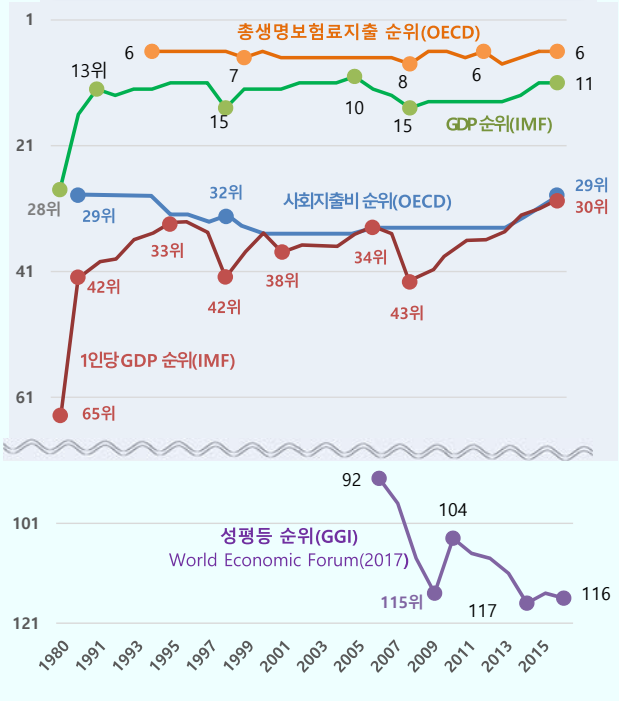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시대(개발시대)에 뿌리 내린 사회정책은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정책 제공, 국가재정의 최소화와 수익자 부담, 그리고 근로 유인의 저해 방지 등으로 설계된 '최소주의 사회정책' minimalist social policy 이고 최근까지도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8

사회정책패러다임의 성찰과 방향

기존 사회정책패러다임의 한계 : 사회부문의 낙후

경제지표와 사회지표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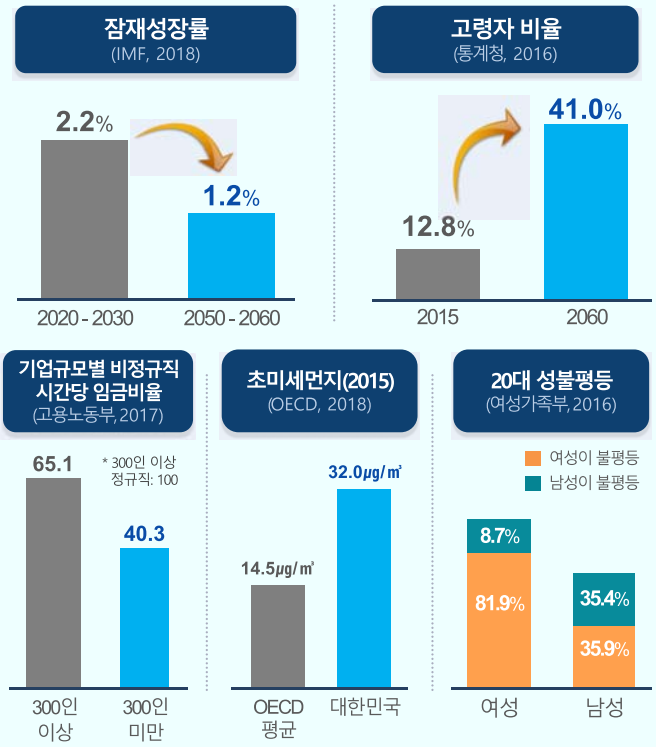


- 1인당 GDP 등 경제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복지, 젠더, 교육, 문화, 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은 뒤쳐져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 심화
- 수출주도성장의 낙수 효과가 약화된 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중산층이 대거 민간보험을 통해 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현상이 가속화 됨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예, 사회비전 2030) 기초생보법 제정, 보육서비스 확대, 성평등정책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 개발 시대에 각인된 '최소주의 사회정책'이 바뀌지 않았고 특히 노동시장 및 성별 격차 해소, 경제수준에 맞는 공공복지 확대가 지체되었음

9

현재의 진단 : 지속가능성 위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고착화된 위기와 새로운 도전

고착화된 위기

- 저성장의 고착화와 재원조달 능력 하락
- 고령자 증가로 인한 내수 위축 및 복지비용 증가
-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재산·교육기회 격차 심화
-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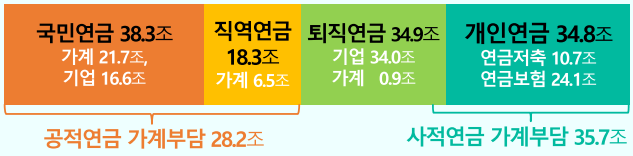
새로운 도전

-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의 국민적 민감도 증가
- 4차 산업혁명과 고용불안의 확산
- 성평등적 사회질서로의 재편 요구
- 1인 가구 증가 및 친밀성과 돌봄의 위기

현재의 진단 : 지속가능성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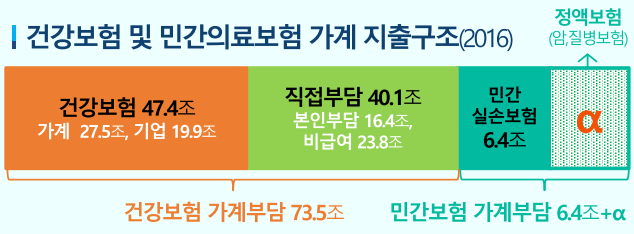
가계의 지속가능성 위기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계부담구조(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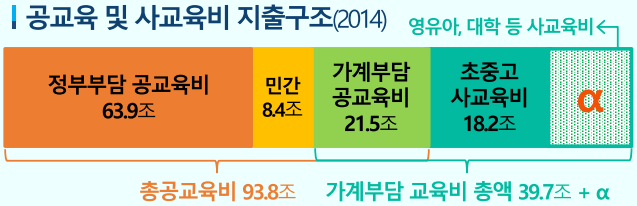


* 기초연금(9.9조) 포함 시 노후대비 총비용(136조) : 2016년 GDP 대비 8.3%

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가계 지출구조(2016)



공교육 및 사교육비 지출구조(2014)



노후, 의료, 교육, 주거 등 생활비용의 과도한 가계부담

시장 과잉의 역사적 유산

- 공공사회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삶의 불안을 민간보험, 사교육, 민간 전·월세 등 가계부담(시장)을 통해 대응하는 구조가 80년대부터 역사적으로 정착

재생산 비용의 과도한 가계부담

- 노후, 의료, 교육, 주거 문제에 과도한 사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계는 지속가능성 위기에 봉착

가계 자원 배분의 왜곡

- 공공사회정책의 미흡으로 가계의 합리적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복지정책 확대와도 갈등관계 형성

현재의 진단 : 5대 위기

대한민국 위기의 현주소



생활의 위기	노동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의 위기	정부의 위기
• 생계불안 (빈곤/사각) • 주거불안 • 육아불안 • 교육불안 • 건강불안 • 노후불안 등 6대 불안	• 장시간 노동 • 비정규직 양산 및 비애 • 영세자영업자의 위기 • 청년실업 • 노동의 가치 추락	• 성장률 둔화 • 창의성과 역동성 둔화 • 노동/자본 균형 파괴 • 경제 비민주화	• 저출산 • 고령화 • 안전불감 • 부패사회 • 전근대성의 잔존 • 비민주적 조직문화 • 범죄 창궐	• 정부신뢰의 위기 • 조세 부정의 • 재정의 위기

문재인정부 포용국가(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국제적 동향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및 사회정책의 중요성 재조명
- 사회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력' 배양이 사회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부상

World Bank IMF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불평등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방해 •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정책의 강조 • 인적자본 강화를 통한 혁신의 중요성 부각
OECD	•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 불평등이 장기 성장 저해 • 1인당 GDP 외 환경, 고용, 문화 등 사회지표 개선 강조 • 인적자본 강화, 성별격차 해소의 중요성 강조
ILO	•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 :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제고 •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서 '사회보호 최저기준' 재정립(202호 권고)
European Union	• 사회투자 패러다임 : 생산적 요소로서 사회정책(교육과 직업훈련,아동보육)과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 강조 • 사회투자를 통한 사회혁신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듦
UN	• 지속가능발전(SDGs) : 경제 우선에서 환경, 사회, 경제의 선순환 발전 강조 • 경제 목표 외 빈곤, 성평등, 환경, 교육 등 17개 목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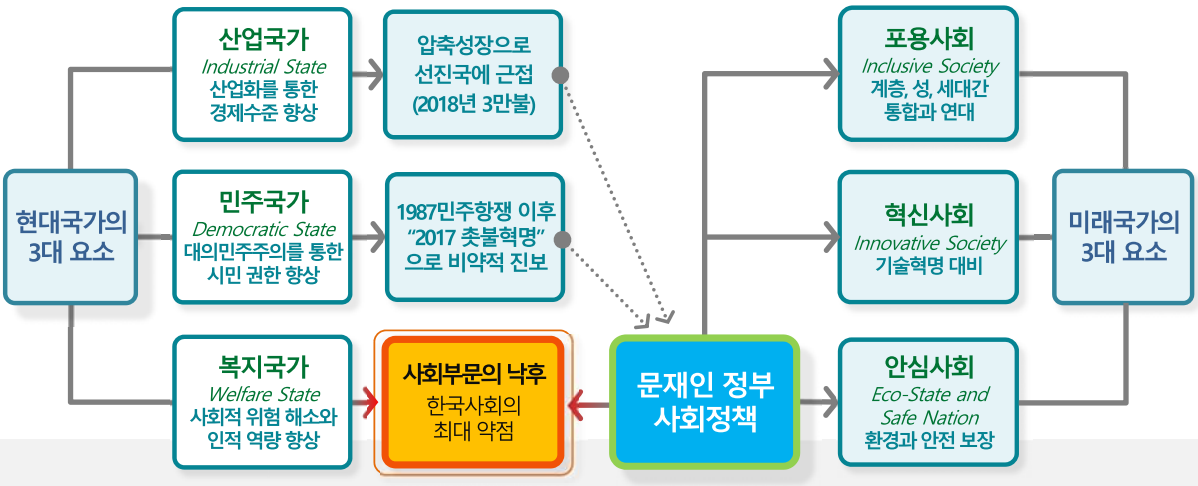


14

사회정책패러다임의 성찰과 방향

한국사에서 문재인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임무

지체된 복지국가의 완성과 미래사회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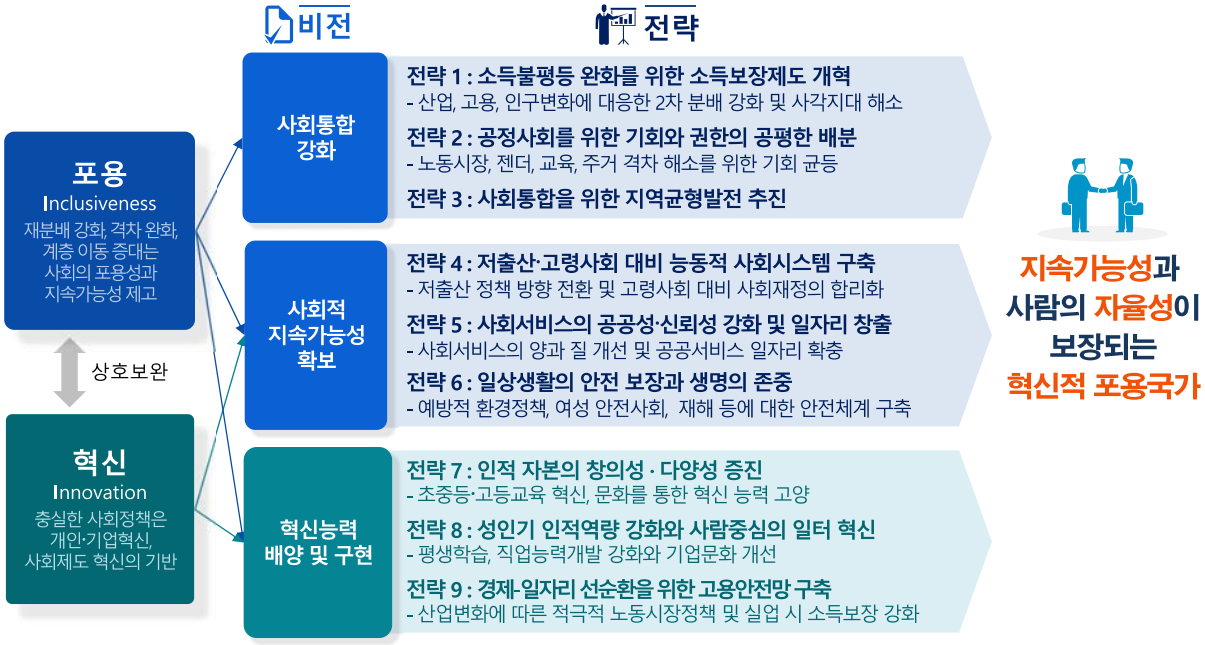
한국은 2차대전 이후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이나 사회정책의 낙후로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 지체된 삶의 질을 개선하여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미래의 기술혁명에 대비하여 계층·성·세대간 통합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역사적 사명

15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전 : 3대 비전 9대 전략

-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
-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의 결과(배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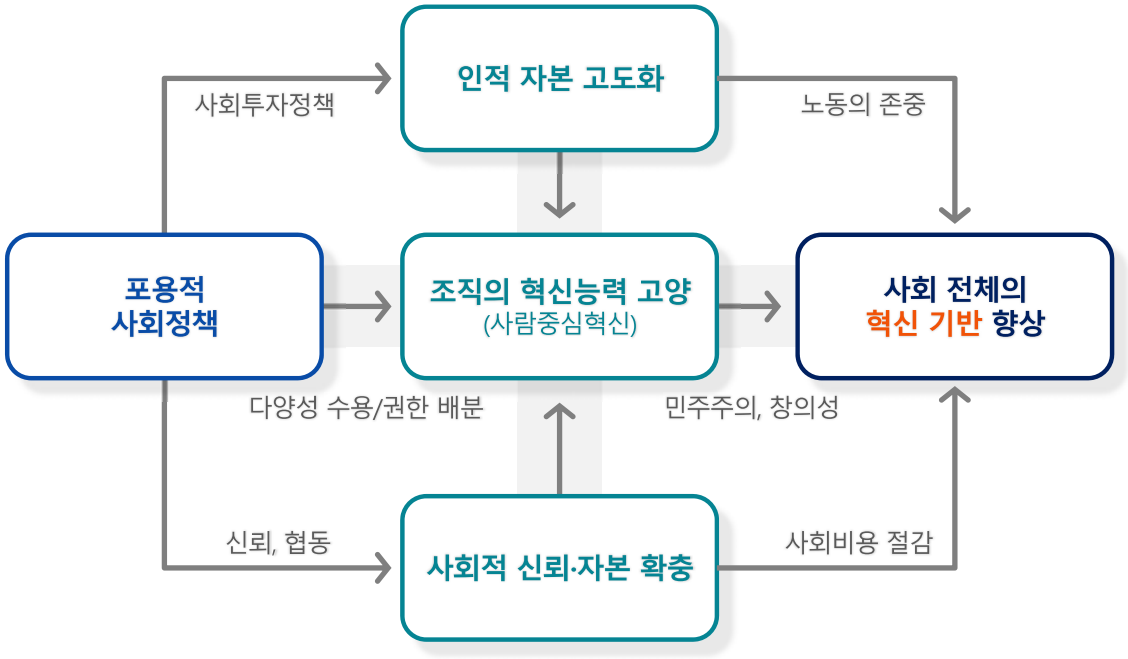


16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국가발전전략에서 사회정책의 역할 재인식: 혁신능력 배양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능력 향상에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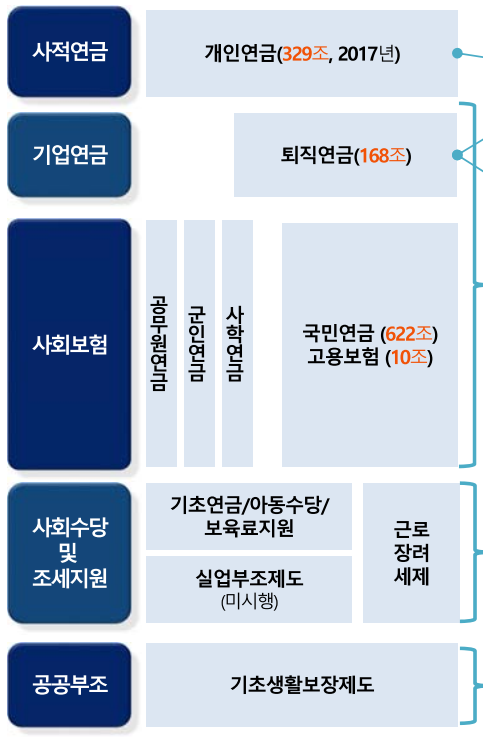
17

9대 전략별 추진방향과 과제

18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전략 1: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소비자 보호기능 취약

- 불완전 판매와 높은 해약률
  - * 1994년 부터 2001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1,157만건) 유지율 33.2%
  - * 2001년 도입된 연금저축의 10년 경과 후 유지율 52.4%

광범위한 사각지대

-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연금에서 비정규직 등 배제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층 사각지대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간 광범위한 간극

낮은 보장성

-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과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 실업급여의 낮은 보장 수준 및 짧은 지급기간
-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의 적정성 문제

제도 간 연계성 및 정합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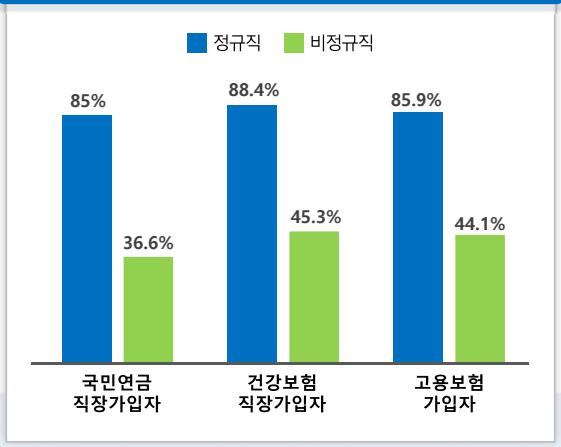
-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자녀장려금의 정합성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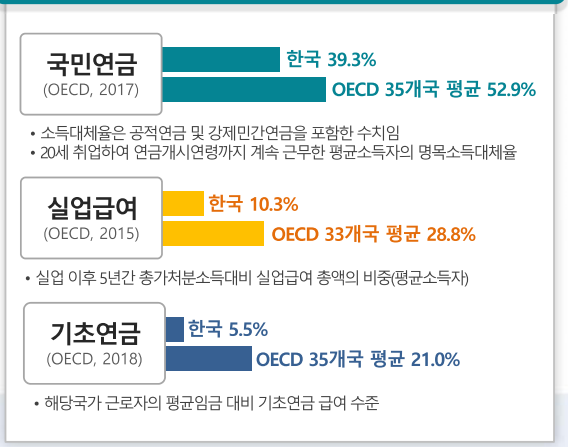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전략 1: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2017)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수준 국제비교



- 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인 사회보험의 보편주의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여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각지대 잔존
-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보험이 사회통합보다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부작용
-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핵심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이 낮아 **생활보장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근본적 정책전환도 필요한 시점

20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전략 1: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근거	개혁 방향 및 정책	
사회보험 강화론	● 노후, 의료비 문제에 대한 중산층의 생활 불안정 ● 민간보험시장의 생활보장 기능 불안정	● 공적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비기여방식의 수급권(예, 출산크레딧) 확대 및 노동시장·조세행정 개혁으로 사각지대 축소	사회보험·기초소득보장 동시 강화
기초 소득보장 강화론	●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형 근로 확산으로 사회보험의 대규모 사각지대 ● 정규직 위주 사회보험이 계층 격차 확대	● 기초연금, 아동수당, 실업부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조세지원방식의 현금 수당 확대 ● 기초소득보장방안 강구	
개인연금 퇴직연금	● 낮은 수익률, 높은 해약률로 인한 낮은 보장성	● 상품 및 투자정보 공시 확대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연금시장 합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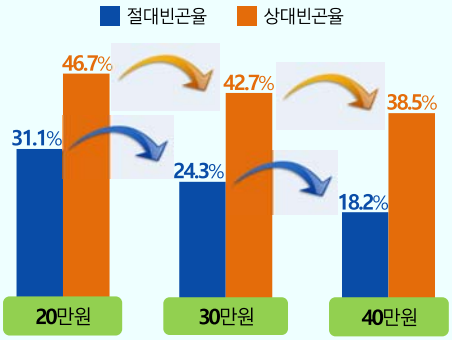
21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소득보장제도개편방향 : 기초보장과 사회보험 동시 강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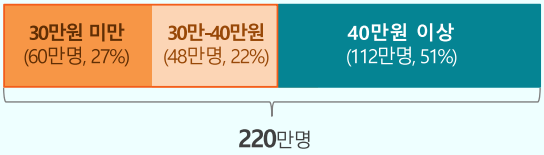
-2016 가계동향조사,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분포(10년 이상 가입자)

-2017년 말, 국민연금공단 월별 통계-

수급자의 절반가량이 40만원 미만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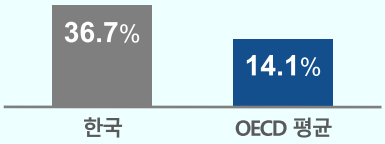
- 기초연금 추가 인상 시 절대빈곤율은 현저히 완화되나 **상대빈곤율은 크게 줄지 않음**
- 기초연금을 3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10년 이상 장기 가입한 국민연금의 평균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비슷해져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이 하락하고 사보험시장으로 이동 가능성
-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상위 30% 노인의 국민연금액이 하위 50% - 70% 노인의 총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보다 적어지는 소득역전 발생으로 **연금제도 간 정합성 상실**
- 따라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함
- 노인의 상대 빈곤율 완화는 기초연금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소득비례적 속성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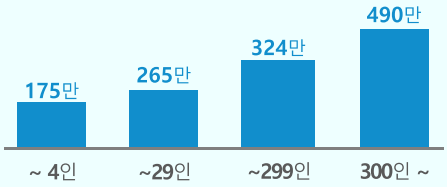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전략 2: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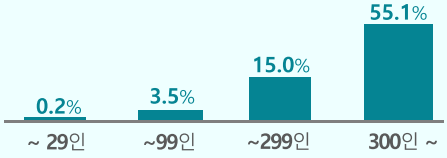
성별 임금격차 (OECD 2016)



기업 규모별 월평균 임금 (고용부, 2017)



기업 규모별 노조 조직률 (고용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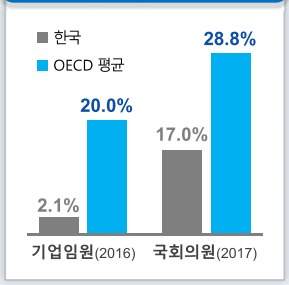
- 기회와 권한, 그리고 소득의 공평한 배분은 지난 수십년 간 개발시대에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희생된 한국사회의 공정성 확보에 필수적
-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핵심적 원인 중 하나는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성별(남-녀)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 대기업 중심 경제발전으로 인해 **생산물시장에서의 대기업 독과점**과 수직·종속적 원하청 관계 고착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형성
- 대-중소기업간, 정규-비정규직간 큰 폭의 임금격차와 비표준화된 임금체계가 대기업의 아웃소싱 및 비정규직의 사용 유인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되는 악순환
- 기업별 노사관계체제에서 형성된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구조는 **노동 약자 대변 기능 미흡**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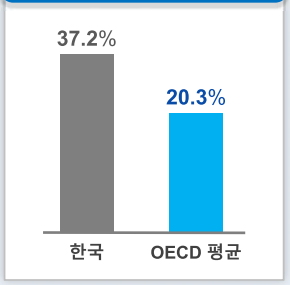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전략 2: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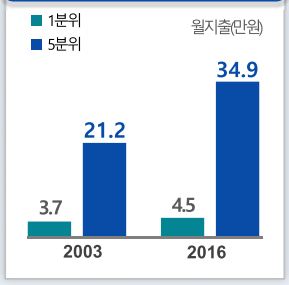
젠더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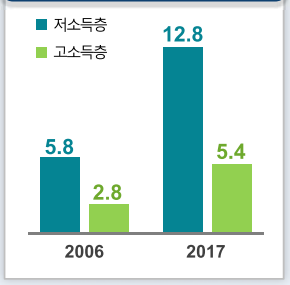
젠더
여성 중 저임금근로자, 2016



교육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주거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배수



- 경제 수준에 비해 성평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기업임원, 국회의원 등)에서 여성 대표성이 극히 낮아 성별격차 해소의 장애요인
- 기업의 채용, 배치, 승진, 보상 등 노동시장 전반에 **성차별 구조가 내재**되어 있고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책임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대등한 경쟁이 어려움
- 사교육 등으로 계층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통한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가 미흡**하여 공정 경쟁의 기반이 상실됨
- 주택공급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미흡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등 주거격차 해소가 진척되지 못함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전략 2: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노동 정책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수출주도 경제성장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불평등 용인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경제성장의 필요 조건(선순환 관계)으로 인식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형식적·선언적 정책목표와 실제 정책방향의 괴리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비정규직(간접고용)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 부족	비정규직 감축 정책의 지속 추진(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등)
불합리한 원하청구조 개선 및 하청 근로자와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정책의 미비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시정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공정성장 기반 마련(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강화 등)
임금 격차 해소,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지 부족	최저임금 인상,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등 저임금 근로자 소득 증대, 동일업무 수행 정규-비정규직 및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 지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포괄적 사회적대화 체계의 형식화와 활용 미흡	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여성 등 노동시장 약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축 및 권한 부여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전략 2: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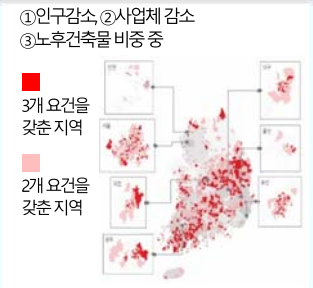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성평등 정책	◉ 노동시장 성별 격차 : 여성인력 활용 중심의 취업 지원 정책으로 고용의 질 저하 (예: 시간제 취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 유리천장 :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의 형식적 시행과 의사결정에서 영향력 미흡 (예: 실효성 부족한 제도 설계, 낮은 목표치 설정) ◉ 정책추진기반 : 도구 중심의 성 주류화와 성평등 정책의 주변화	◉ 여성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존 법·제도의 실효성 및 실행력 강화 (예: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시정 기구의 실질화 등) ◉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적극적 차별 개선 조치 강화(공공기관 임원 할당제 강화, 민간기업 여성임원 확대 환경 조성 등) ◉ 각 부처의 성평등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예: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반 강화)
교육 정책	◉ 지역간, 계층간 교육 양극화 확대와 속도를 제어하기에 충분치 못한 정책적 대응 (정책확대를 위한 실증근거 부족)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중심의 선별적 교육복지	◉ 공교육 투자 확대로 모든 아이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무상교육, 기초학력 보장, 지역균형선발 등) ◉ 다문화, 장애, 학업중단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교육 복지 제공
주거 정책	◉ 주택시장 정부개입 최소화와 시장을 통한 배분, 임대인 위주의 임대차 시장 ◉ 공급자 위주, 물량중심의 임대주택 확충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 부족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적정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청년 등 수요자 기반 주거 지원 강화(생애주기-소득계층별 맞춤형 지원)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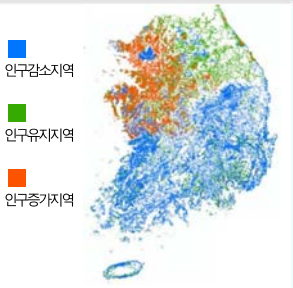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전략 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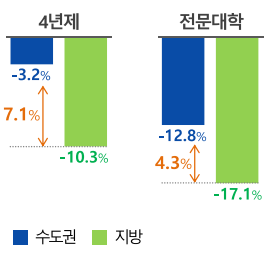
2016년 쇠퇴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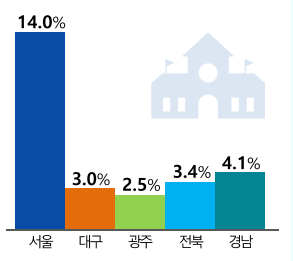
2040년 인구증감 예측



대학 정원 감소 지역간 격차
(2013 대비 2018년 대학 정원)



국공립보육시설비율(2015)



- 고착화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가 인구감소 등으로 심화 예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이 2040년 전국의 52.9%에 이를 전망
-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학령기 인구 감소로 심화 예상(지방 대학의 입학 정원이 향후 10년간 급속히 감소 예상)
- 어린이집 등 공공복지시설과 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의 지역 격차도 줄어들지 않아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 온존
- 쇠퇴하는 구 도심지 및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정책 필요

27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전략 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도시재생 뉴딜

주거 복지
- 노후주거지 정비
-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회 통합
-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 공공복지시설 확충

도시경쟁력 회복
- 구도심 신거점공간화
- 중심지 기능 회복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경제생태계 조성
- 주민주도 조직 육성

- **지자체 주민 역량강화 + 혁신거점조성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 거버넌스 구축**
- **도시재생 뉴딜을 전국적으로 확산**

스마트시티

스마트한 도시문제 해결/서비스 제공
- 시민 수요 파악, 지능형 도시관리를 통한 맞춤형 문제해결 추진
- 스마트기술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 지역간 삶의 질 격차 해소

새로운 혁신 기회 창출
- 노후 쇠퇴도시 스마트형 도시재생 추진
- 혁신도시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선도모델 → 지역혁신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혁신의 플랫폼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 (세종,부산)
-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확산 모델 구현**

28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전략 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혁신도시 시즌 2

혁신도시의 '新지역성장거점화'에 집중

특화발전
- 도시별 특화발전 종합발전계획 수립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확대
- 혁신융복합단지 조성

기업집적
- 특화산업 및 이전기관 연계 기업 유치
- 규제완화 및 사무공간 등 입주지원
- 산학연 생태계 조성

정주여건개선
- 스마트 혁신도시 건설
- 복합혁신센터 등 정주 인프라 개선
- 교통체계 개선
- 가족동반 이주 지원

상생발전
-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및 인재 양성
- 구도심 및 주변지역 연계 상생발전
- 혁신도시 발전재단

-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30%, 기업입주 1천개, 가족동반 이주율 75% 달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

사람중심경제의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
- 토목 SOC 투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 전환
-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 SOC 투자** 과감한 확대 (2018년 5.5조 → 2019년 8.7조)
  * 지자체 투자분 포함시 12조원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일자리 효과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모든 지역에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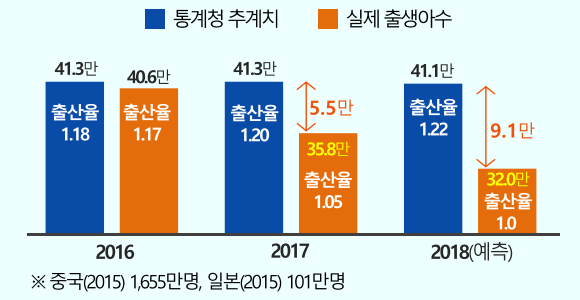
- **지역이 주인인 주민주도형·지역밀착형 사업 추진**
- **중단기 계획의 범정부 추진체계**(중앙·지자체·민간)

29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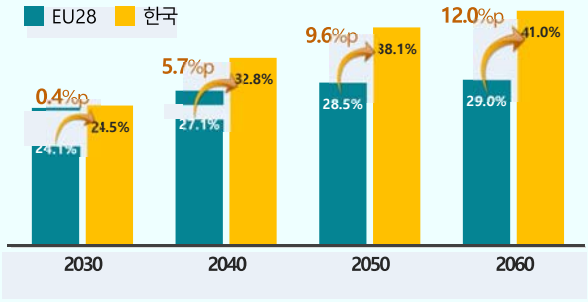
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예상을 넘어 급락하는 출생아수(2017-2018)



※ 중국(2015) 1,655만명, 일본(2015) 101만명

노인인구비율 변화 국제 비교(203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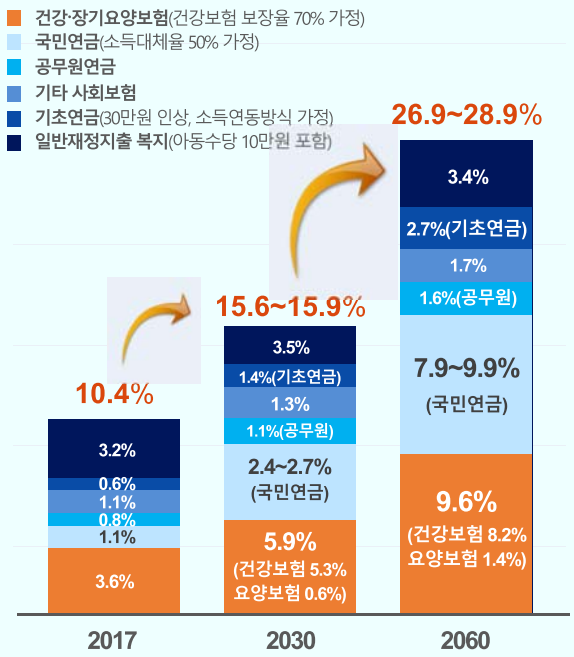


- 2017년 출생아 수가 통계청 추계치 2035년 수준(35.8만)으로 급락하여 18년이 앞 당겨졌고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재앙적' 수준의 인구절벽 직면
- 주거, 교육, 독박육아 등 결혼·출산의 높은 기회 비용,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 감소와 출산 급락
-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되, 동시에 아동과 청소년 개개인을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사회적 환경 조성
-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2030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을 추월하고 2060년 이전에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
-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은 사회관계망, 빈곤율, 건강상태 등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단독가구 증가 (2008년 19.7% → 2017년 23.6%)로 더 악화 예상
- 노인은 보호 대상이자 인구감소기에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설정하는 새로운 시각 필요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지출의 장기전망(GDP 대비율)



- 국정과제를 충분히 반영해도 2060년 GDP 대비 사회지출은 26.9~28.9%로 추정되어 현재의 EU 28개국 수준(2014년 기준, 27.5%) 도달
- 가장 큰 비중은 공적연금지출이나 (국민·기초·특수직역연금 GDP 대비 13~15%) 높은 노인비율과 낮은 연금액을 감안하면 적정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건강보험·요양보험 지출은 9.6%로 양호하나 가계의 사적 의료비 지출을 포함할 경우 사회 전반에 상당한 부담 예상
- 고령화 대비 복지재정 합리화의 핵심은 무조건적 재정축소보다 공적연금 비중 확대와 건강·요양보험 비용의 합리화임. 특히 민간의료비의 억제가 중요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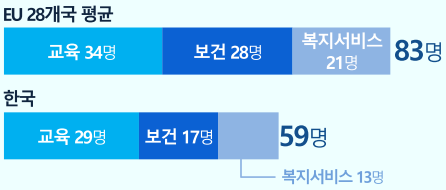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저출산 대책	● 생물학적 출산율과 출생아 수 상승에만 초점을 둔 보육지원 중심의 단선적 정책 ● 이상적 가족모델로서 핵가족을 전제로 한 국가주도의 캠페인과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서 도구화 ● 고착된 성불평등 개선 없이 여성에게 책임 전가	● 청년주거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출산친화적 문화 조성 등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 ●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성평등적 사회·기업 문화의 적극적 조성
고령사회 대비	●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공적연금, 건강보험비용 억제에 과도한 초점, 가계 지출 사적연금·사적의료비에 대한 무관심 ● 베이비 부머 등 주력 소비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기능 과소 평가 ● 고령층을 보호의 대상으로 상정해 4050세대 등 미래 노인의 인적 역량 축적의 중요성 미인식, 굵고 짧은 생애주기로 설계된 고용시스템으로 인한 고령자 차별적인 고용제도와 관행 ● 건강한 노후생활환경 조성 미흡: 건강관리, 노인 친화적 주거, 활동적 노인 사회관계망 등	●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공공재정과 가계부담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합리화 모색, 특히 공적·사적의료비 총량과 노인의료비 합리화가 중요 ● 주력 소비 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 ● 4050세대의 인적역량강화 정책 체계화, 고령자가 차별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 구축(긴 생애주기 고용시스템 설계, 정년연장 및 관련 지원, 임금체계개편 등) ● 건강한 노후는 고령화 비용 합리화의 주요 수단. 건강·주거·사회안전망을 노인친화적으로 재편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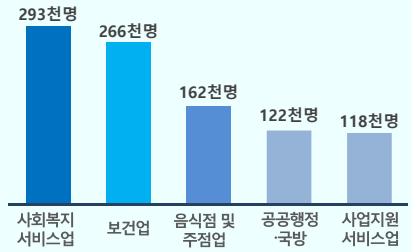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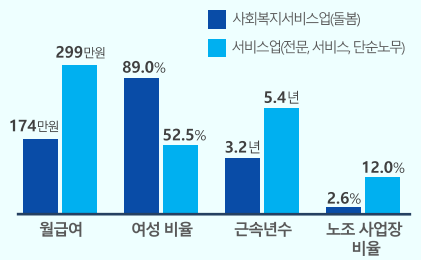
인구 1천명 당 교육·보건복지 취업자 수 2017



취업자 증가 예상 상위 5대 업종 2016~2026 노동부



돌봄 분야 근로실태비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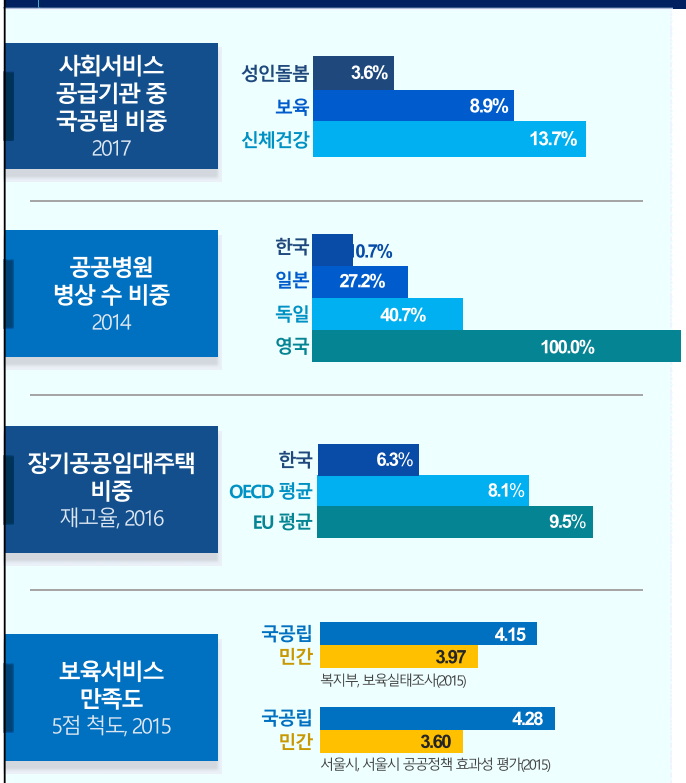


- 사회정책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노동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동력
- 특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비중이 낮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음
- 11년간(2007~2017)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1.3%이나 보건·복지업은 10.3%로 급속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10년간 취업자 증가 예상 업종 중에서도 1,2위를 차지
-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가 부족하고 민간일자리는 임금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 열악. 잦은 이직으로 숙련이 형성되지 않아 서비스품질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이 분야의 일자리 확충과 질 개선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성별 임금격차 완화, 더 나아가 아동·성인의 인적자본 확충에도 기여하여 경제사회적 외부효과가 매우 큼

33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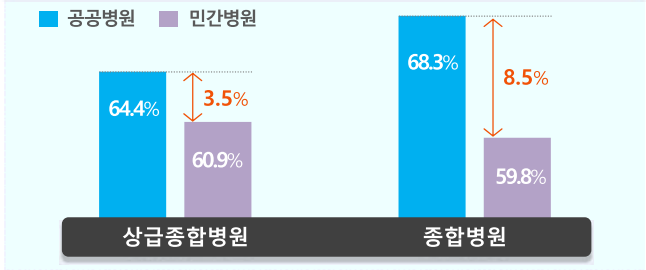
- 과거 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자보다는 민간공급자를 확충해 와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늘어나는 사회서비스의 욕구를 민간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이 낮은 서비스의 질로 이어져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동시에 일부 민간시설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수준이 아님
-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공급자 비중 확대 (공공보육시설 및 공공유치원 이용률 40% 달성)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 필요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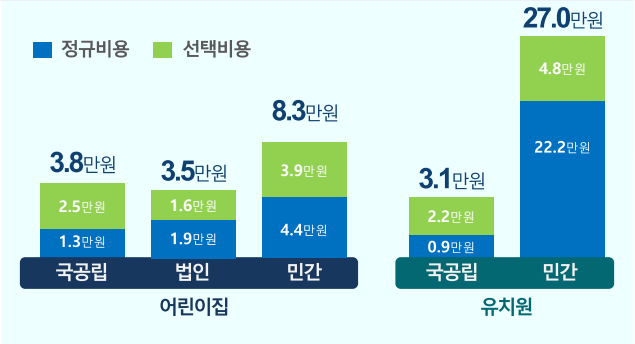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2016)



보육 · 교육비 월평균 가계 추가 부담 비용(2017)



공공보건·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비용절감 효과

-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공공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민간병원보다 약 4~9%p 더 높으며, 민간병원의 낮은 보장률은 결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짐
- 연간 10조원 이상의 보육과 유아교육비를 정부가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공급자의 영리추구 동기로 인해 정부의 막대한 보육지원비의 의미가 상실되고, 가계의 보육비 부담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35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일자리 창출	● 민간공급자의 대규모 확충으로 민간부문 일자리의 과잉과 공공부문 일자리의 절대 부족 (예: 2017년 기준 보육 종사자 33만명 중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3만 6천명으로 10.9%) ● 낮은 수가체계에서 민간서비스공급기관간 경쟁 유도가 인건비 경쟁으로 이어져 비정규직 채용이 급증하는 등 민간공급자의 일자리 질 하락 ● 보건복지 일자리를 여성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지 못함	● 공공서비스 공급자를 적정수준으로 확충하여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고 (예: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34만개 달성) 민간 공급기관의 일자리 질 개선 유도 ● 수가체계의 재검토와 민간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통해 인건비 출혈 경쟁을 막고 고용의 질 개선 ●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을 남녀 임금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신뢰성 강화	● 공공서비스 공급자 확충을 최소화하고 민간공급자를 통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으로 판단 ● 민간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기관 경쟁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가져온다는 시각	● 적정수준의 공공서비스 공급자 확충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 총 비용을 합리화 시킴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경쟁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한 공공·민간 간 협력 관계 구축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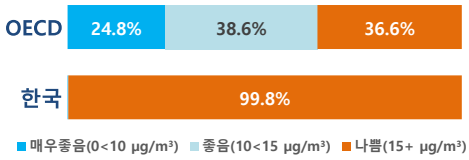
전략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신뢰성 강화 (계속)	●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공급자의 서비스가 공공 공급자보다 품질이 높을 것이라는 시각 ● 공급자 지원방식의 문제점(예: 시설의 사유화, 관료적 통제)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지원방식을(바우처) 도입했으나 복지체감도 향상과 서비스품질 향상 효과성에 대한 논란 제기 ● 각종 서비스의 독자적 발전으로 지역단위에서 서비스간 연계성, 통합성 부족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 발생 ●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보다 시설(기관)수용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민간서비스공급자에 대한 품질관리 부재 (예: 규제완화 차원에서 서비스공급자 등록제로 전환)	● 서비스질이 좋은 공공 공급자를 적정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 ● 적정 수준의 공공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확충을 전제로 수요자 지원방식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 수요자 지원방식이 서비스 질 제고에 더 효과적인 영역을 선별 ● 지역단위에서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조 확립 (예,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 지역단위의 개방적 시설(중간 시설) 확충으로 지역사회보호 중심의 시스템(커뮤니티 케어) 구축 ● 시설 및 기관의 품질관리체계 효율화 (정보공개 강화, 기관 등록제 → 지정제 재전환 검토)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6: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노출 비율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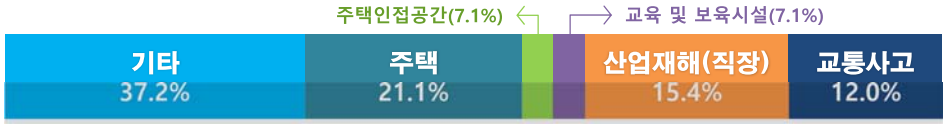
2018년 혜화역 여성 집회



여성신문, "1만여 여성 모여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2018.5.19.)

- 국민의 높아진 환경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미세먼지, 대기오염, 유해 매체 대책 등 환경정책 전반의 지체 현상 발생
- 디지털 성범죄(예: 몰카) 대응과정에서 기존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등 여성의 일상 생활 안전보장과 대응체계 변화에 대한 요구 증가
- 건물의 노후화, 대형화가 진행되고 자연재해 등이 겹치면서 대형 복합사고의 위험 증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노출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2006년 한국사회 사고 총량 (총 1,238만 건)



* 기타 = 다중이용시설, 상업공간, 운동공간, 자연공간 등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6: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환경 정책	● 선개발 후 환경 : 개발부처 주도 사업계획 설정으로 환경부는 문제 발생 이후 사후적 개입 ● 공해방지시대의 소극적인 매체별 기준주의 환경관리와 취약계층 및 민감계층에 대한 대책 미흡 ● 개발로 인한 갈등 발생시 지역주민, 시민사회 등과 형식적 소통으로 갈등관리 취약	● 예방적 환경목표 설정으로 환경·경제·사회의 선순환 구조 확립(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환경정책적 위상 복구, K-SDGs 추진) ● 수용체(사람)중심의 맞춤형 환경기준 설정 (환경질환 등).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정의적 정책접근(규제에서 서비스로) ● 환경 관련 정책설계· 평가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환경민주주의 강화
성평등 정책	● 여성 폭력에 대한 분절적 접근으로 디지털 성폭력, 여성혐오 등 다양한 양상의 폭력 대응 미흡 ● 여성 폭력 대응 시스템의 몰성성(gender-blindness)과 실적 중심 폭력예방 교육	● 성별 위계에 근거한 폭력(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 ● 피해자 관점의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구축과 성인지적 관점의 폭력예방교육 강화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6: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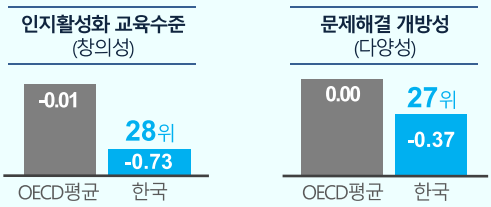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안전 정책	● 안전을 개인의 불행으로 인식,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해 위험을 수용하는 위험감수사회	● 안전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위험예방사회 구축
	● 사고발생후 2차 피해감소를 위한 공적책임 미흡 (예: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난계획·행동지침 마련 및 사고 후 공동체 복원력 방안 강구
	● 자연재난과 사회위험요인이 연계된 신종·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 미흡 (예: 메르스사태, 대형 홍수, 구제역 등)	● 신종·대형·복합 재난 대비 재난안전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컨트롤타워 정비 (예: 국제적, 중앙정부 내,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 등)
	● 백화점식 안전규제와 물량위주의 보여주기식 전시성 안전행정	● 안전규제 및 감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망사고 절감으로 국민체감형 안전사회 실현
	● 제조업, 임금근로자 중심의 산업안전, 산재보험 체계, 위험의 외주화(예: 주요 30대 기업 산재사망사고의 85%이상이 하청노동자에게서 발생)	● 산업안전과 산재보험의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 원청·발주처(건설)의 책임강화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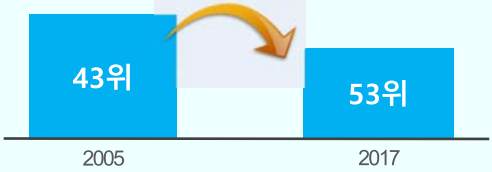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전략 7: 인적자본의 창의성 · 다양성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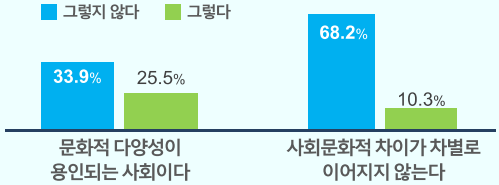
초중등 교육의 창의성 · 다양성 부족
(15세 학생, 28개국, PISA, 2012)



대학교육: IMD 대학경쟁력 순위(60개국, IMD)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017)



- 산업사회모델의 인력 양성과 입시 위주의 초중등 교육은 4차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한계를 보임
  (한국의 PISA 점수는 최상위권이지만, 창의성을 보여주는 문제해결 개방성과 인지 활성화 교육수준은 최하위권)
- 대학교육 역시 대량의 평균적 교육양성체제와 분절된 교육과정으로 국제 경쟁력 취약. 동시에 정부주도 평가와 무한 경쟁·서열화 체제로 대학의 자율적, 창의적 역량 강화 미흡
-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지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적고(정부지출 중 문화관련 예산은 한국 GDP 대비 0.8%, OECD 평균 1.2%) 가계의 문화지출비도 크지 않아 문화향유가 혁신역량 축적으로 연결되지 못함
-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도 한국 사회가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

41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전략 7: 인적자본의 창의성 · 다양성 증진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초중등 교육	● 경쟁과 결과 중심의 학력관 : 지식암기와 입시 중심의 수월성 교육 ● 개별 경쟁의 폐쇄적 학습체제 : 협력성을 상실한 학습 경쟁, 산업사회의 평균적인 인력양성체계와 표준화된 평가체계 ●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 중앙정부 주도의 경직된 교육 체제와 사회·지역과 분리된 학교	● 학생 성장, 참여 중심의 새로운 학력관 정립 : 모두의 잠재력과 역량을 함양하는 포용적 교육 가치 실현 ● 협력적 학습 생태계 체제로의 전환 : 창의력과 소통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 협업 지향적 교육과정·수업·평가체계의 일관된 혁신 ● 지방교육자치 확대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자치 실현,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고등 교육	● 대학의 개별 경쟁 및 서열화 심화(예: 학교별 고립 · 폐쇄적 운영, 지식재생능력 위주 교육과정 운영) ● 정부 주도 대학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평가로 대학의 자율성 약화와 획일화 ● 고등교육의 지역·대학간 격차 심화 및 고등교육의 시장화	● 대학간 공유성장을 위한 연계·협력형 대학 체제 개편 (예: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및 대학간 컨소시움 구축, 융복합 교육과정 활성화) ● 대학의 자율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진단 체제 구축과 대학재정지원 패러다임 전환 ● 고등교육의 투자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간 , 대학간 격차 완화

42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전략 7: 인적자본의 창의성 · 다양성 증진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문화 정책	● 수동적 소비 위주의 문화정책 ● 정치적 · 이념적 편향으로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 · 내용 규제(예: 블랙리스트) ● 공급자지원정책으로 수요자 체감도가 떨어지고 지역별 문화여가시설의 사각지대 발생 (예: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여가시설 배치) ●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 · 편향지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선택권 제약 (예: 영화, 게임 등으로 문화향유 편중 현상) ● 문화정책의 개별화 · 분절화 : 일, 돌봄 등 다른 시간사용 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설계의 한계	●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화정책 ● 문화 · 예술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생애주기에 기반한 사회참여적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확대 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요자 지원 강화 ● 포괄적 문화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영역의 지원과 장애, 젠더,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한 기관 지원 확대 ● 쉼과 여유를 통한 일상적 문화향유권 실현으로 개인의 내재된 창의성 회복(예: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정착, 장애 없는 문화여가서비스 환경 조성 등)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및 NEET 에 대한 제한적 지원체계 ● 영유아기 언어발달 및 기초학력 증진 중심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 진로선택 및 활동역량 지원 ● 청소년기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응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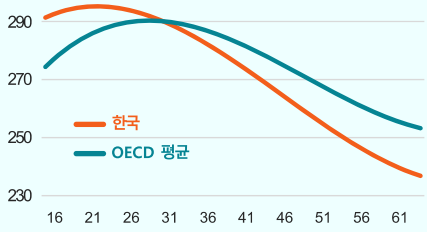
43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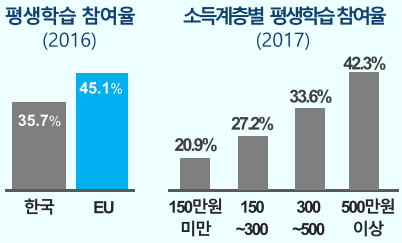
전략 8: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OECD,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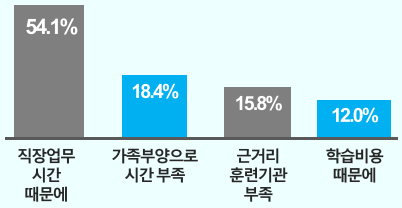
※ 역량은 언어능력 literacy으로 측정하였으며 단순한 문해력이 아닌 개인의 핵심정보처리 능력임



평생학습 참여율
Eurostat., KEDI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요인
KEDI,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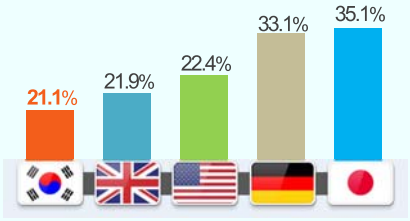
- 한국은 중고등교육기까지(10대 후반-20대 후반)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유지하나 30대 이후 성인들의 능력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성인기 인적역량 확충에 필요한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으며 계층별 격차가 심함
-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부족 등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것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를 막는 구조적 원인
- 평생학습기관 및 관련 프로그램도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뒤쳐져 있고, 공공학습기관 부족, 교육기관간 질적·지역 간 격차가 온존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전략 8: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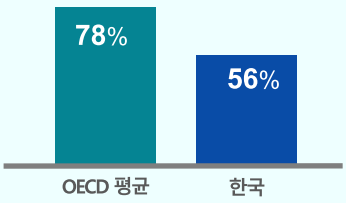
주요국 일터 과업 재량 정도 비교
OECD, 2013

※ 과업 재량 : 일의 재량 정도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일자리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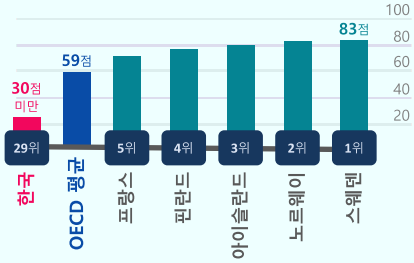


일터의 직무만족도 국제비교
OECD, 2012

※ 직무만족도 : 현 직업에 매우 만족함, 만족함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



여성의 유리천장지수 국제비교
The Economist, 2018



- 직장 내 의사결정 분권화와 직무 자율성 정도는 참여를 통한 창의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기반이 됨
- 한국의 일터는 **과업 재량**과 업무시간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낮아 축적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직무만족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 일터에서 **여성의 입직과 승진** 역시 OECD 최하위권(유리천장지수 29위)으로 인적자원의 다양성을 활용하지 못하며 위계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음
- 일터의 위계적, 타율적 의사결정구조를 수평적, 자율적, 그리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일터 혁신을 통해 노동자의 행복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전략 8: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평생 학습	● 관련 부처(교육·노동부 등) 간 평생학습, 직업훈련정책의 분절적, 비효율적 운용 ●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이 지역의 산업수요와 유리되고 지역 내 주요 인프라(지역대학)와 연계 부족 ● 평생·직업교육 사각지대(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고려 미흡	●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 집행하는 거버넌스구조 구축 ● 지역별 산업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량 강화) 지역대학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직업능력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차별 개선으로 포용적 훈련체계 구축
일터 혁신	● 노동이 배제되는 방식의 기술 혁신 추구와 위계적, 비민주적 조직문화 방치 ● 일터 혁신 관련 정책의 형식적 운영과 기술(예: 컨설팅 사업) 및 현금지원 정책 위주 ● 노사관계 개선, 여성 차별 배제 등 일터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책임투자'의 형식적 운용	● 노동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일터 문화 정착 유도 ● 중소기업 일터 혁신 관련 정책의 실질적 운영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내부 혁신 유도 ●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실질화로 일터 혁신 유도(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노동권 보호 등)

46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사례] 기업문화 및 일터 혁신을 위한 사회책임투자

일본 GPIF의 여성펀드 등 투자 확대

GPIF
일본의 공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일본 GDP의 28%에 달하는 약1,300조원(2017)을 운용

여성 펀드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감안한 ESG 투자원칙 채택. 2017년 9월 MSCI의 ESG 지수 중 여성권력신장지수를 도입. 여성친화적 기업에 GPIF 주식투자분의 3% 수준(약 10조원)을 투자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임

젠더 지수
'여성권력신장지수Japan Empowering Women Index' 는 모건스텐리 자회사(MSCI)에서 구성한 것으로 직원과 임원 중 여성 비중, 사내 젠더 다양성 정책 등을 고려하여 업종, 기업별로 선정된 일본 내 212개 기업으로 구성

기대 효과
젠더다양성이 확보된 기업 투자는 재능 있는 노동력의 풀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 및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

한국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국민 연금
한국 GDP의 약 36%에 달하는 622조원(2017)을 운용(GDP 대비율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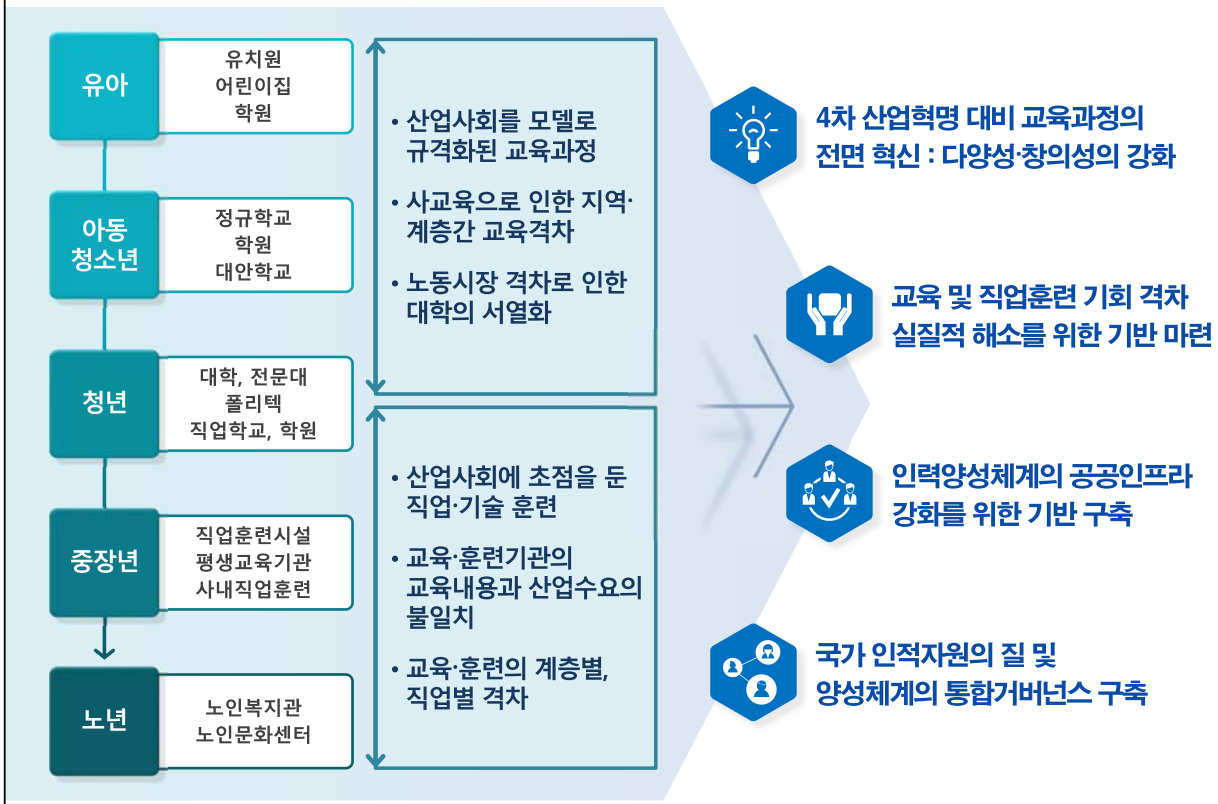
사회 책임 투자
사회책임투자펀드는 2017년말 6.9조원으로 국내주식투자 총액 132조원의 5.3%로 기금 전액을 6개 회사에 위탁투자.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를 내세우나 형식적으로 운용

ESG 지표
환경유해물질 배출 정도(환경), 근로 환경과 인권 및 다양성 관리수준·공정거래 등(사회), 주주 권리 보호, 이사회의 독립성(지배구조) 등의 ESG 지표로 기업을 등급화하여 투자업체 선정

방향
신설될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책임 투자의 형식적 관행을 혁신하여 사람중심적 기업문화가 조성되도록 유도

47

국가 총인적자원의 질 및 관리체계 혁신 방향(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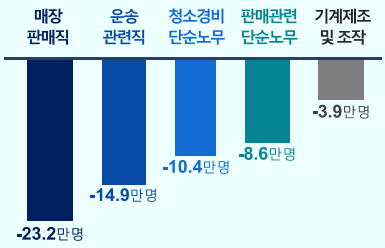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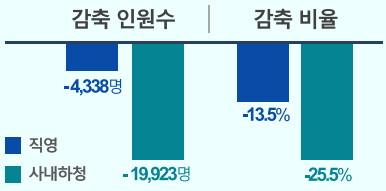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전략 9: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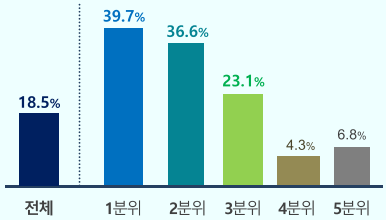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 상위 5대 직업군
(2016-2030)
고용노동부, 2018



경남7개 조선소 인력 구조조정 현황
(2015.12~2016.9)
노동연구원, 2016



비빈곤가구의 가구주 실직 후 빈곤율
(실직 후 3분기 후)
가계동향조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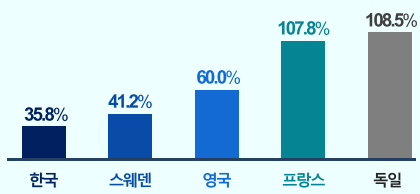
- 4차산업혁명의 진전으로 2030년까지 매장판매직,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일자리 축소 예상(한국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수 531대로 세계 최고수준)
- 경기변동과 세계시장의 경쟁 격화로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산업(예, 조선업)에서도 부분적, 국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
- 한국의 구조조정은 사내하청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실직자 상당수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 과정에서 숙련을 상실하고 빈곤 위험에 직면
- 기술 변화와 경쟁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숙련을 보존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충실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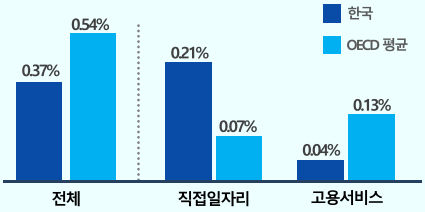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전략 9: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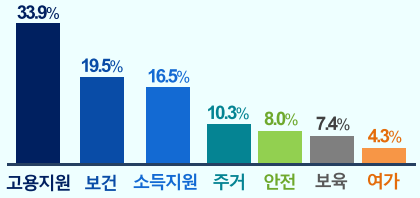
실업자대비 실업관련급여 수혜율
(2004~2014 평균)
OECD, 고용부, 통계청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OECD SOCX, 2016)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통계청, 2017)



- 한국의 실업급여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한 낮은 수혜율, 낮은 보장성과 짧은 기간 등으로 실직자의 소득보장기능이 극히 미흡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대부분의 예산이 직접일자리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고용률 제고에 효과적인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수요에 비해 미흡
- 약한 고용안전망은 노동시장의 하향 이동과 빈곤으로 실직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여 개인은 물론 경제사회 혁신의 지체 요인이 됨
-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직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실효성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합**되어야 함
- 충실한 고용안전망은 일자리와 숙련의 유지를 통해 역량을 발휘하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사회전반의 혁신 능력의 기반이 됨

50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전략 9: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구조조정 대응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핵심 당사자인 노동시장 약자(하청) 등이 구조조정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	● 하청 근로자 등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 적극 활용
● 일시적 위기와 구조적 위기를 구분하지 않고 재무적 관점에서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근로자 퇴직 중심의 인력구조조정 방식 일상화	● 기업경쟁력 약화의 장단기적 원인 분석이 선행되고 퇴직이 최후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예: 경기침체에 대응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빠른 회복이 가능했던 독일 사례)
● 사후적, 미봉적인 구조조정 정책 : 위기 상황 직전이 되어서야 정책적 개입을 고려	● 구조 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체계 구축(예: EU의 변화 예상과 구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 업종·지역별로 분산된 대응체계 및 중앙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지원제도와 정책집행체계의 분절화	● 유사지원제도(예: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의 연계운용 및 중앙·지방간 효과적인 집행체계 구축
● 고용안전망이 실업자·구직자들의 개별적 상황 및 욕구에 부합하지 못함	● 실직한 40-50대 가장을 표적화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개발(예: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대책,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행 등)

51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전략 9: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 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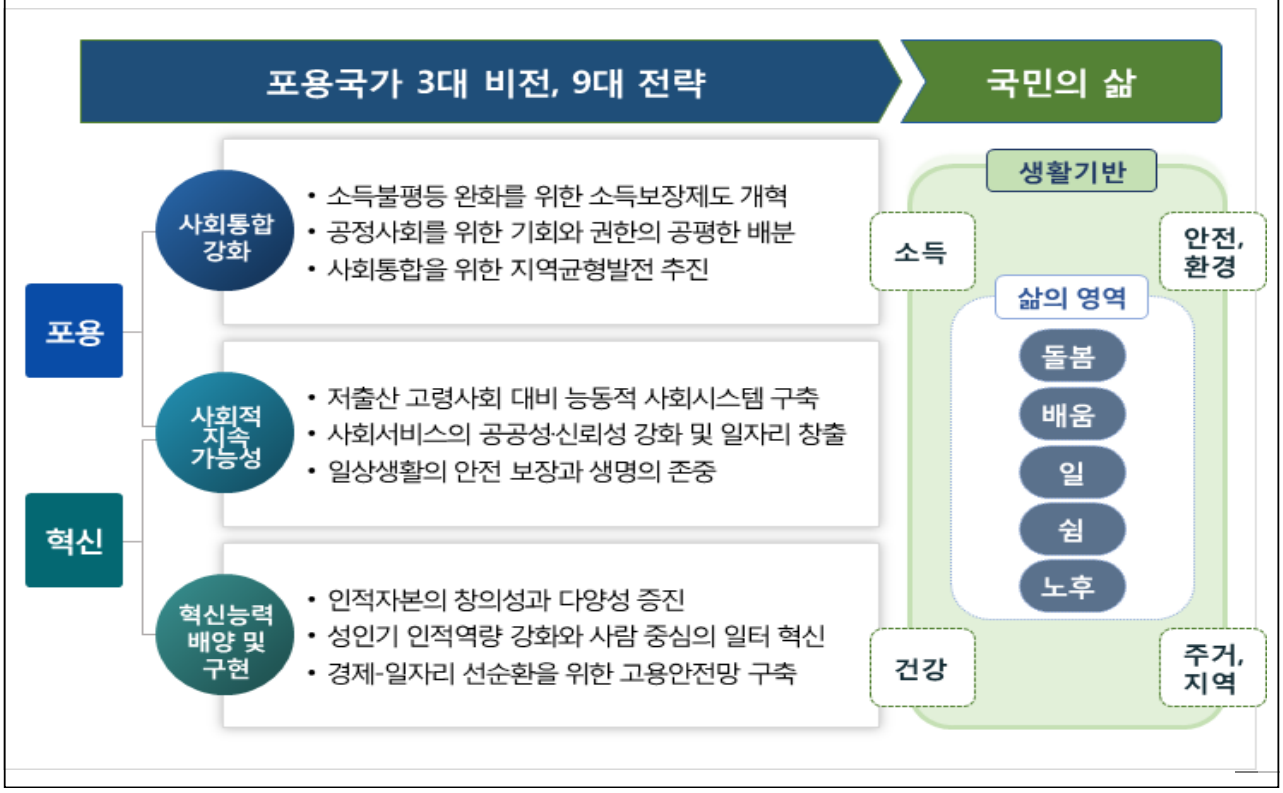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기술진보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고용안전망 대책이 부재하고 개별 정책별로 대안 마련	통합적·체계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용안전망(예 : 비정형근로자 보호체계 등) 구축 필요
실업급여 등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간 실효성 있는 통합 운영 결여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전제로 실효성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통합적 고용안전망 운영체계 구축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대책의 일관성 결여와 낮은 보장성으로 일자리 상향 이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함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보편적 적용, 실업부조제도 도입, 실업급여 최대수급기간 연장 등 소득보장정책의 적극적 확대 검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대안 모색 미흡	직접일자리사업을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정책 효과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 통폐합 추진
위급한 고용위기 발생 시(예 : 외환위기, 청년고용) 고용서비스가 최소수준으로 확대되고 그 이후 관련 인력에 대한 양적 · 질적 투자 미흡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가 모든 노동시장정책에 연계되도록 기본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확대 필요 (예 : 일선 상담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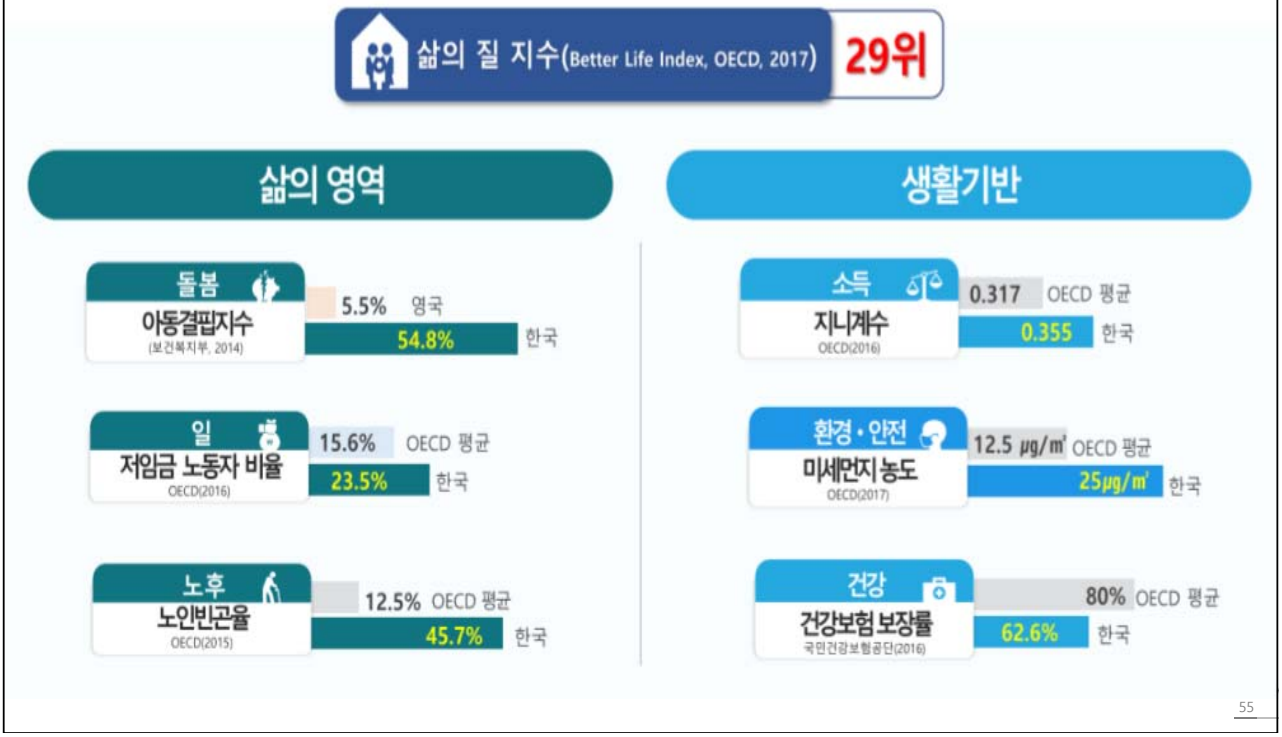
포용국가 3개년계획을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53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그리고 국민의 삶



현재 국민 삶의 선진국과의 격차



돌봄

아동

영유아
10명 중 **4명**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중 **8명**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 발달장애인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자립** 지원
- 직업교육·훈련 인프라

다양한 가족

미혼모 ·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 수혜인원 확대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56

배움

불평등의 연결고리 해소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대학생 **1/3**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학력 보장
교육 격차가 완화됩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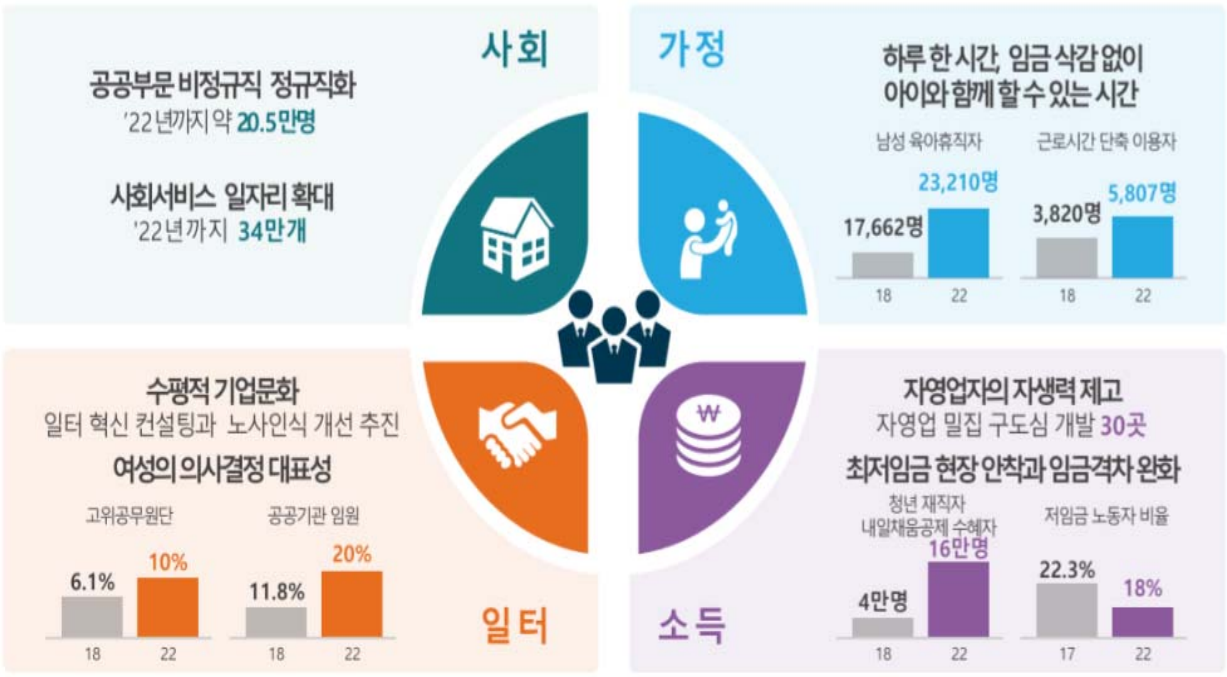
더 **다양한** 교육 기회
- **고교학점제** 도입
- **마을교육공동체**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 혁신인재 **12만 7천명** 양성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 성인 **10명 중 4명** 평생학습 참여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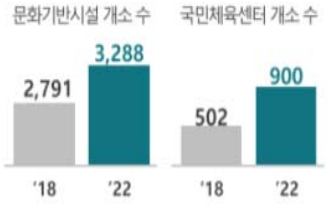
일



58

쉼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동네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문화, 스포츠 향유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일터에서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술인 파견 지원 확대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휴가 시간은 늘어납니다



59

노후

인생 2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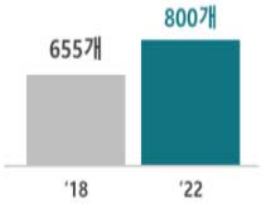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은 **두 배**로

-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5만명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80만**개

문화체육활동으로 즐거운 노후

노인 문화·체육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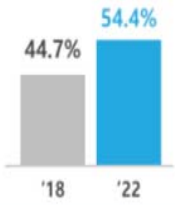
안정적인 노후

치매 부담 비용은 **절반**으로

어르신 **4명 중 1명**은 방문건강관리 수혜

어르신 주거서비스 **4만호**

치매환자관리율



방문건강관리 대상



소득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30~**50**만명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157만명
특고·예술인 등에게 고용보험 확대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액을 늘리고 지급 기간도 연장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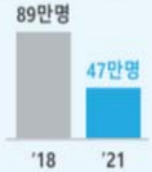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비수급 빈곤층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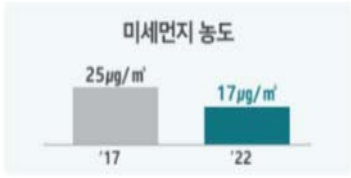


61

환경/안전

쾌적한 환경

노후 경유차와
노후 석탄발전소가 줄어
미세먼지 환경이 개선됩니다



안전사고 예방

교통사고 · 산재 · 자살 사망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안전사고 발생도 줄어듭니다



여성 폭력범죄

여성 폭력범죄,
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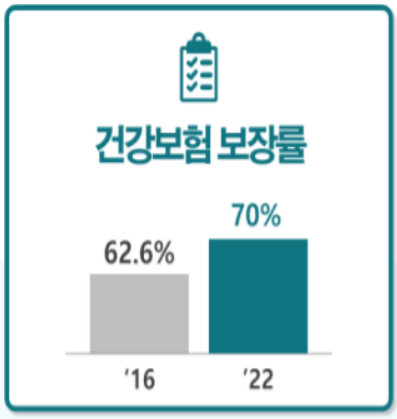
아동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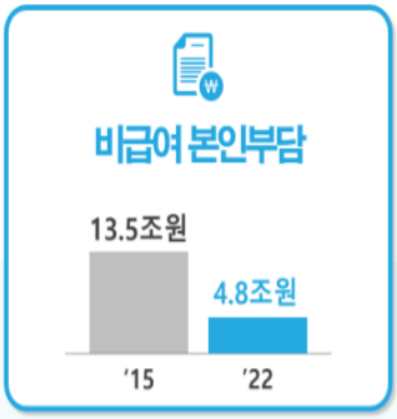
아동학대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재학대 발생도 줄어듭니다



62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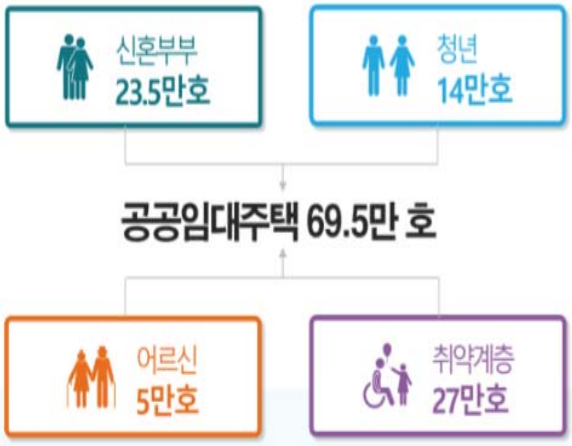


MRI, 초음파,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의 2/3가 줄어듭니다

저소득층이 경험했던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63

주거/지역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이 마련됩니다.

사는 곳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 교육 · 건강 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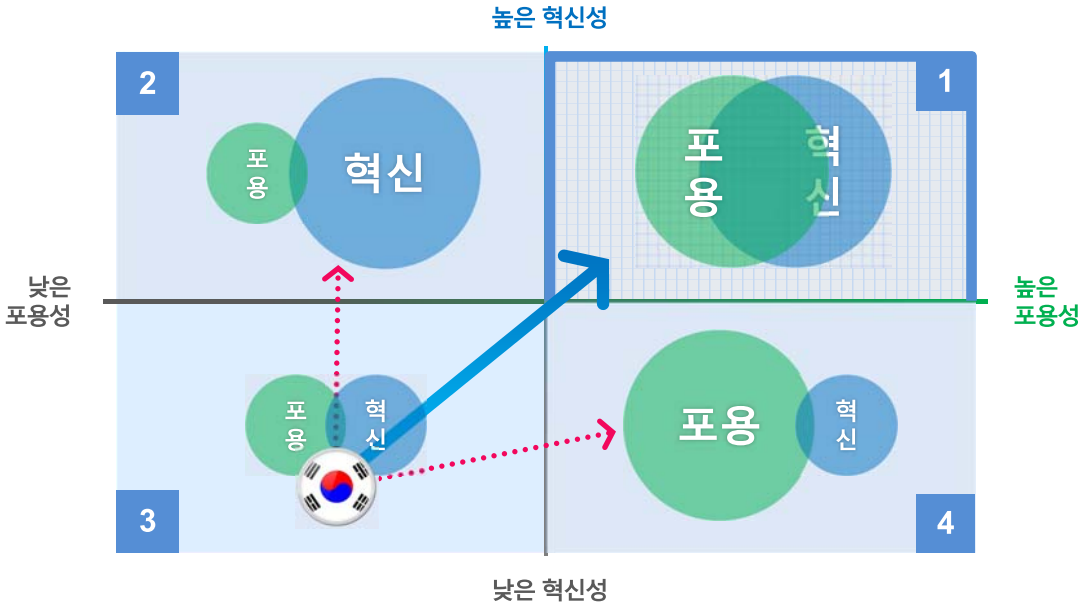
64

한국사회 미래 비전

65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 : '혁신적 포용국가'

-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으로 포용성과 사회의 혁신 능력 모두 낮은 상태임.
  포용성은 낮고 혁신능력은 좋은 사회(2분면) 혹은 포용성은 높고 혁신능력이 낮은 사회체제(4분면)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어려움
- 바람직한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은 충실한 사회정책을 통해 높은 포용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높은 혁신 능력을 갖춘 "**혁신적 포용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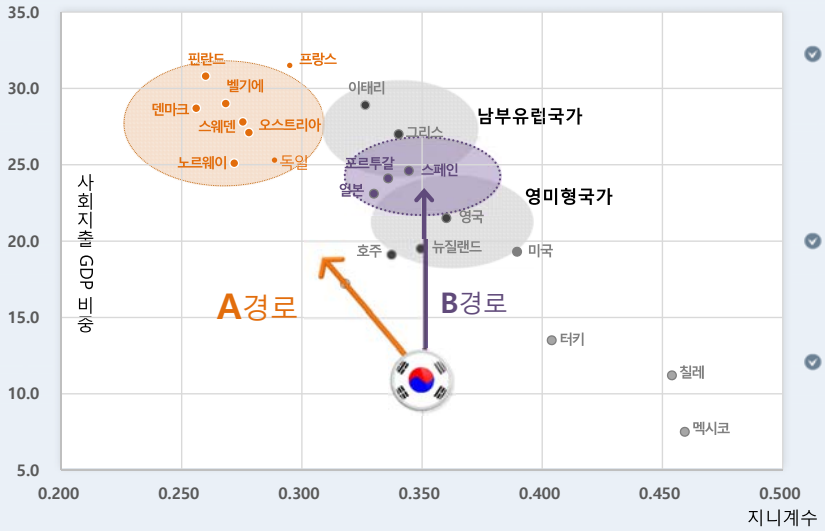


66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 : ' 혁신적 포용국가 '

- 사회정책의 혁신이 없으면 한국은 노동시장·복지격차가 극심한 남부유럽국가의 특징과 미흡한 공공복지로 불평등이 심한 영미형 특징이 결합된 비효율적인 사회체제가 될 가능성(B경로)
- 영미형은 혁신능력이 최고 수준이나 남부유럽은 높은 복지비를 지출에도 사회혁신 능력이 낮음.
  바람직한 경로는 계층간 격차가 적고 사회적 혁신능력을 갖춘 "혁신적 포용국가"(A경로)로의 이행임

국가별 사회지출비중과 지니계수의 분포(2015)



- 상위소득 20% 및 하위소득 20% 계층에게 가는 현금급여의 비중 (OECD, 2014) : 스페인(25%/10%), 이탈리아(34%/9%), 포르투갈(40%/11%), 그리스(31%/8%), 한국(25%/25%)
- OECD 삶의 질 지표(OECD, 2017) : 스페인(19위/38개국), 이태리(25위), 포르투갈(28위), 그리스(35위), 한국(29위)
- 사회혁신능력(The Economist, 2017) : 스페인(28위/45개국), 이태리(17위), 포르투갈(22위), 한국(12위)

67

포용국가, 향후의 추진 전망

68

향후 일정

2019. 2.	포용국가 3개년 계획 발표
2019. 4.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0'의 기본 방향 발표
2019. 9.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0'의 구체 내용 발표

69

포용국가와 지방정부

70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과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위상

포용국가 건설의 동반자

지방정부의 역할

1) 포용국가 정책의 효과적 실현
2) 포용국가 정책의 추가적 투자
3) 포용국가 정책의 자체 추진

지방정부의 과제

1) 포용국가에 걸맞는전달체계의 강화
2) 포용국가로의 재정확보 및 투여
3) 시민들의 참여와 협치

71

Thank you

감사합니다

MEMO

MEMO